

최 신 판 례 예 규

Marketing Tax consulting

본점에서 계약체결, 대금결제 등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후, 지점에서 관련 후속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도 본점에서 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 가능함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가 본점에서 폐차 매입 관련 계약 체결, 대금결제 및 모든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폐차 관련 절차(폐차인수·등록말소)는 폐차장이 있는 지점에서 하는 경우로서 수집한 폐차를 본점에서 가공 없이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본점에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103분의 3)가 가능한 것임

사전법규부가-1020, 2022.12.08

■ 질 의

- 신청법인(또는 “본점”)은 중고자동차 판매업 및 자동차해체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본점 및 지점은 자동차매매업 및 자동차해체업 등의 업종으로 사업자등록되어 있으며
- 지점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으로 등록되어 있음(본점은 등록되지 않음)
- 본점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사업자와 폐차차량 관련 계약체결, 대금결제 등을 하였고, 폐차 관련 절차(폐차인수, 등록말소)는 폐차장이 위치한 지점에서 수행하였으며
- 폐차차량은 본점의 의사결정 하에 지점 사업장소재지에서 제3자에게 가공없이 그대로 판매 후 본점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
- 한편, 신청법인은 주사업장총괄납부를 신청하여 적용받고 있음

질의

- 자동차해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본점에서 폐차

매입 관련 계약 체결, 대금결제 및 모든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폐차 관련 절차(폐차인수 등록말소)는 폐차장이 있는 지점에서 하는 경우 본점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103분의 3) 가능 여부

■ 회 신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가 본점에서 폐차 매입 관련 계약체결, 대금결제 및 모든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폐차 관련 절차(폐차인수·등록말소)는 폐차장이 있는 지점에서 하는 경우로서 수집한 폐차를 본점에서 가공 없이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본점에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비적격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법인(A법인)이 분할한 사업부문의 자산을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B법인)에 양도함으로써 「법인세법」 제46조의5제1항에 따라 양도손익을 계산할 때 B법인이 A법인의 주주에게 분할합병의 대가로 지급하는 B법인 주식의 가액은 분할합병 등기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제5호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서면법규법인-1000, 2022.05.20

■ 질 의

- (질의1) 법인이 다른 법인과 업무용승용차를 공동으로 임차한 경우 감가상각비 한도액 계산 방법
- (질의2) 법인이 다른 법인과 업무용승용차를 공동으로 임차한 경우로서 운행기록 등을 작성 비치하지 않은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계산 방법

■ 회 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비적격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법인(A법인)이 분할한 사업부문의 자산을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B법인)에 양도함으로써 「법인세법」 제46조의5제1항에 따라 양도손익을 계산할 때 B법인이 A법인의 주주에게 분할합병의 대가로 지급하는 B법인 주식의 가액은 분할합병등기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5호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심사청구인은 “국세심사위원회 의결에 법령, 증거에 명백히 위반된 판단이 있음”을 근거로 「국세기본법」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을 신청할 수 없음

서면질세-6703, 2022.11.28

■ 질 의

- 서면질의 신청인이 따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음

질의

- 「국세기본법」 제65조의2제1항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잘못된 기재, 계산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국세청장은 직권으로 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국세심사위원회 의결이 법령 증거에 명백히 위반된 판단에 근거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경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심사청구인은 “국세심사위원회 의결에 법령·증거에 명백히 위반된 판단이 있음”을 근거로 「국세기본법」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을 신청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재개발사업등으로 임대 중이던 당초의 장기 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에 해당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초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등록이 말소된 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법규재산-4847, 2022.12.13

■ 질 의

- 장기임대주택(B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2020.8.18. 전에 멸실된 후, 개정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자동말소된 경우로서 재건축 완료로 취득한 주택(B'주택)이 아파트에 해당하여 임대등록하지 못하는 경우
- 소득령 155<23>에 따라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A주택) 양도 시 소득령 155<20>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으로 임대 중이던 당초의 장기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에 해당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초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등록이 말소된 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